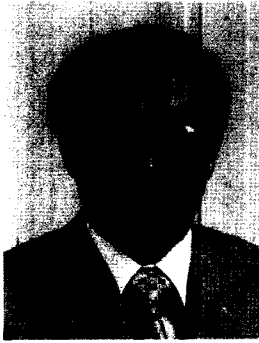


# 국제환경협약과 주류산업



한 기 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目 次 ■

- I. 들어가는 글
- II.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 III.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 IV. 국제환경 협약
- V. 국제환경협약의 확대와 주류 산업의 대응

## I. 들어가는 글

최근 들어 기후변화협약이라든가 몬트리얼 의정서, 바젤협약 등 이른바 국제환경협약이 종종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전에는 국제협약하면 주로 정치·외교 또는 통상과 관련한 협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약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국내 환경규제 뿐 아니라 국제환경협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이 같은 영향은 규모 뿐 아니라 다양성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요즈음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때 산업계가 받게 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영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부족도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

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국제환경협약의 최근 동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국제환경협약의 탄생 배경과 최근 현황, 그리고 우리 경제, 특히 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을 하였다.

## II. 지구 환경문제의 대두

지난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현대산업사회는 몇 가지 환상에 잠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자연환경자원은 무한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환상으로 인해 인류는 자연과의 공존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최상의 목표로 하는 성장 일변도의 발전과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지향적 산업발달과 경제 개발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자연 자원의 고갈과 자연의 자정(自淨)능력을 넘어선 공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아울러 유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빈곤국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이들 국가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시 자연 파괴로 이어져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이상 기후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이 급속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산림을 황

폐시키고 건축물과 차량을 부식시키는 산성비가 지구 곳곳에 내리고 있으며, 산업폐기물에 의한 토양과 하천, 그리고 해양의 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지구 환경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오존층 파괴

1930년대부터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세척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CFCs)와 소화제(消火制)로 사용된 할론(halon)은 대기에 방출되어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후반의 관찰에 의하면 남극지역의 오존층은 정상 오존층의 5%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오존층 파괴는 대기 중으로 투과되는 자외선의 양을 현저히 증가시켜, 피부암, 백내장 및 면역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의 염색소 파괴를 촉진시켜, 식물의 성장 및 수확을 저해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이산화질소(N<sub>2</sub>O) 등 이른바 온실가스로 불리우는 물질은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의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대기의 온도 상승을 야기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양극지대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 상승함으로써 육지 면적이 감소되고 경작지와 주거지가 상실될 것이며, 기후체계에 이상이 생겨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로서,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화석연료 사용 증대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연평균 0.5%씩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역에 따라 0.3~0.6°C 상승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향후 100년간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100%증가하여 대기온도는 1.5~5.8°C 상승할 전망이다.

### 3. 산성비

중화학공장, 화력발전소 및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은 대기오염 뿐 아니라 대기중의 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PH 5.6 이하를 나타내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성비는 건축물의 부식을 촉진하는 한편, 토양, 하천 및 호수의 산성화를 초래하고 산림 및 농작물의 황폐화를 촉진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4. 생물종(種)의 감소 및 멸종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생물종의 서식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멸종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간 2만5천~5만개의 종이 멸종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도가 계속될 경우 2,000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 300만 -1,000만 종의 생물종 중 10~20%는 멸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종이 멸종되면, 유용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식량, 약품 등)을 기대

하기 어렵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됨으로써, 환경파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 5. 산림 파괴

산업활동에 따른 공해물질의 배출 증가와 이에 따른 산성비 증가, 그리고 무차별한 벌목 활동은 지구표면의 산림, 특히 열대림을 대량 파괴시켜 왔다. 그 결과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 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림은 현재에는 약 7%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산림의 파괴는 생물종의 서식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고, 산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반면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능력을 저하시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6. 토양유실 등 사막화 현상

화학비료의 남용, 살충제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무절제한 경작방식과 산림의 남벌로 인한 토양의 생산성 감소와 황폐화는 토양유실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한편, 기하급수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 7. 해양오염

핵폐기물, 산업용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산업폐수, 생활 폐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은 적조현상을 유발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류 체내에 중금속의 농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인간건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 8. 독성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화공약품, 살충제, 비료 등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과 산업화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산업 폐기물이 불법 또는 재활용의 명분으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수출, 방출됨으로써 이들 개도국의 환경과 인간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Ⅲ.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오늘날 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각국의 오염배출과 환경파괴가 더욱 확대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환경 파괴의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데다 각국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해결방안을 각국이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국가간에 또는 EU와 미국, 선진국과 개도국 등과 같은 국가 그룹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지구환경문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냉전종식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

동서간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제한적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고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는 또한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관심대상이 됨으로써, 중요한 국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지구환경문제의 발생과

그 파급효과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관련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2. 환경문제의 경제·통상 문제화

지구환경문제는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모두 각국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자연히 경제·통상 이슈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위 “그린라운드” 협상이라고 불리는 무역과 환경문제도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 3. 환경문제의 남·북 문제화

환경문제가 유엔 등 중요 국제외교무대에서 다자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대립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제환경회의는 선·개도국간의 강한 입장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4. 환경문제의 국제규범화 추세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

환경협약의 교섭과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약 200여 개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있다.

## IV. 국제환경협약

### 1. 현황

지구환경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국가나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의의 장이 바로 국제환경협약이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얼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과 같이 국제환경협약은 대부분 특정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001년 12월 현재 약216개가 채택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해양분야 관련 협약이 이중 40% 가량인 8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생물보호 관련 협

약이 50개, 담수보호 관련 협약이 15개 순이며,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얼 협정 등 대기관련 협약은 12개이다.

이 중 약 44개가 중요성을 갖는 국제환경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이 중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40개 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동성야생동물종의 보호에관한협약 등에도 조만간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가입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해양어업 분야로 13개이며, 그 다음 생물보호 분야가 7개, 대기기후 및 핵안전 분야가 각각 6개를 차지하고 있다.

### 2. 주요 국제환경협약 내용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기 분야

##### ①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대기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한발, 생태계

<표-1> 국제환경협약 채택 현황(2001.12 현재)

(개)

	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타
채택	216	12	15	86	50	13	11	29

자료 : 환경부

<표-2> 우리나라 가입 국제환경협약 (2001.12 현재)

(개)

	계	대기기후	담수보호	해양어업	생물보호	핵안전	유해물질	기타
채택	40	6	-	13	7	6	1	7

자료 : 환경부

파괴, 저지대 침수 등 이상 기후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1996년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이러한 의무부담이 없으며, 우리 나라는 현재 개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부담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선진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진통을 겪어 오다가 지난해에는 미국이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 없이는 의무부담 달성에 과도한 경제적 비용이 들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토의정서에 탈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금년 중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 발효를 서두르고 있는 선진국들은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없이 자신들만 감축의무를 준수해야 할 경우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대단히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국가 그룹에 포함시킬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의무부담 개시 시점과 부담의 정도 면에 있어서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오랜 준비기간과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②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의 감소와 온실효과의 충격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며 지구전체 대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반구에 분포하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염화불화탄소(CFCs)와 이산화탄소가 지리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고,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에 대해서도 식물개화 저해, 잎 크기 감소, 농산물 수확 감소, 플랑크톤의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사슬 파괴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려로 1985년 3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그 후 규제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고 생산 금지 일정도 앞당겨져 현재에는 프레온(CFC), 할론, 사염화탄소, 염화불화탄화수소(HCFC) 등 총 95종의 물질이 생산 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와의 오존층파괴물질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4년부터 개도국 자격으로 본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프레온 생산량을 동결하기 시작하는 등 감축일정에 들어갔다. 프레온가스는 자동차, 전자, 전기, 냉동·냉장기기, 건축자재 및 기타 단열재 등 우리 나라의 수출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대체물질 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 2) 해양 분야 : 런던 협약

폐기물의 해양 투기와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972년에 채택된 협약이 런던협약(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다. 중금속, 석유류 등의 해양투기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협약은 해양환경분야에서 최초의 범지구차원 협약으로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3년에 본 협약에 가입하였다.

### 3) 폐기물 분야 : 바젤(Basel) 협약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새로이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이른바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 인간의 경제활동에 투입된 모든 원자재와 에너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폐기물로서 다시 자연으로 버려지게 된다. 세계 각국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계로 배출되는 폐기물도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억 톤 이상이 독성, 폭발성, 부식성, 발화성, 감염성 등 잠재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로서 특별히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유해 폐기물이다.

문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이 이 같은 유해 폐기물을 외화 획득을 위해 환경파괴와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개도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1989년에 UNEP의 후원 하에 바젤협약(공식명칭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 채택되었다.

1992년에 발효된 이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엄격히 규율하는 최초의 범세계적 환경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교역 극소화, 불법교역 규제 등 국가간의 공동지침을 확립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채택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 폐기물 수입을 사전에 통제와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은 대내적으로는 환경보호 단체 및 여론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해 폐기물로 인한 개도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5월 현재 146개국이 바젤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하였다.

### 4) 유해화학물질 분야 : 유해화학물질 사전통고승인(PIC) 로테르담 협약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제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생산되어 적절한 관리, 처리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가운데 60년대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85년에 UN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행동강령(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s)이 채택되었고, 1987년에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The London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Chemicals in International Trade)이 채택되었다. 그 후 1989년에는 “유해 화학물질 교역시 사전통고승인

절차(PIC) 적용을 위한 로테르담협약”이 채택되었다. PIC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국가와 수입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다.

2001년 4월 현재 73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9년 9월에 서명하였다.

## 5) 생태계 분야

### ①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황폐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 생물종의 2~8%가 25년 안에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생물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산림 파괴에 따른 서식처의 상실뿐만 아니라 지나친 동·식물 거래의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은 많은 이윤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상업적 교역이 많은 종의 과도한 착취를 초래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역을 규제할 법적 규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CITES), 특별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등이 있으나 단편적 성격 때문에 범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생물종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동 생물종에 대한 이용국의 접근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종의

보유, 이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의 모태가 되었다. 2001. 5월 현재 180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 ②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을 관리·예방하는 한편, 이러한 관리조치가 유전공학제품의 국제거래를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 당사국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①LMOs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s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 ②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수입국이 의정서 목적과 부합하는 국내규제절차에 따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리고 ③의약품 사용 LMOs를 제외한 모든 LMOs에 대해 국가간 이동시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9월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1년 8월 현재 서명국 수는 총 105개국이다.

### ③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동·식물의 남획으로 인한 멸종 가능성 증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미적, 과학적, 문화적, 휴양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야



생 동·식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동식물의 종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획 및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CITES가 1973년 3월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1,0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시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국제거래가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동식물의 멸종이 방지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 협약에 1993년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5월 현재 총 15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④ 습지보호협약(Ramsar 협약)

20세기 후반 들어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습지보전을 목적으로 한 람사협약이 1971년 2월 이란의 Ramsar에서 채택되었다. 본 협약의 주 내용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람사 습지목록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nature reserves)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2001년 5월 현재 124개국이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97년 3월에 가입하였다.

#### 6) 산림 분야

인류가 농경생활을 영위하기 이전에는 지구상에 약 62억 ha의 산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990년대 현재 약 34억 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산림감소 현상은 특히 열대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매년 1천540만 ha에 달하는 열대산림이 사라져 왔다.

산림은 과거에는 목재의 공급원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림이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고 생명체의 생존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토양침식의 방지 등 각종 생명체의 생존상 필수 불가결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에 열대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대림행동계획(TFAP)이 수립되었고, 198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열대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열대림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1992년 리우회의에서 국제산림헌장인「산림원칙선언」을 채택한 것이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 ①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1970년대에 들어와 열대목재생산국(주로 개도국)의 산림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반면, 열대국가에서의 산림황폐화(deforestation) 속도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열대목재의 원활한 생산 및 무역거래촉진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SFM)의 달성이라는 전지구적 당면과제간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열대목재협정 체결 협상이 착수되어 1983년에 채택되었다. 그 후 내용이 강화되어 1994년에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이 채택되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목재 경제와 관련

된 회원국간 협력, ②비차별적인 목재거래 실시 촉진, ③지속개발의 진전에 기여, ④서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 달성에 필요한 전략 이행, ⑤ 소비의 장기적 증대와 공급의 지속 및 지속적 산림관리의 비용반영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무역의 확대 및 다변화 추진 등이다.

2001년 5월 현재 생산국 29개국, 소비국 23개국 등 총 52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5년에 가입하였다.

② 사막화방지협약(심각한 한발 및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본 협약은 국제적 노력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특히, 아프리카 국가群)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1994년 6월에 채택되었고, 우리 나라는 1994년 10월에 서명하였다.

## V. 국제환경협약의 확대와 주류산업의 대응

국가간 교역의 확대와 환경문제 심화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은 갈수록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으로부터 국내 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류산업의 생산활동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부여받게 될 경우 정책당국은 각 산업체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정책 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의 부과이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을, 에너지세는 에너지 자체의 양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단위 탄소(에너지) 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종량세이다. 현재 핀란드 등 북구 선진국들이 탄소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최근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일본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기업에 당장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많은 국내기업들이 탄소세(에너지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세(에너지세)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사용 저감은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계의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탄소세(에너지세) 도입은 이 밖에도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한편 주류 생산의 주 원료가 되는 각종 농산물 가운데 유전자 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LMOs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류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이 밖에도 간접적으로 주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환경협약 강화와 함께 국내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는 대기오

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그리고 폐기물의 배출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 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경영의 추진, 오염물

질 배출을 줄이는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 등이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 추진과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인 것이다.

Man is no more than a reed.... the weakest in nature.

But he is a thinking reed.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Blaise Pascal-